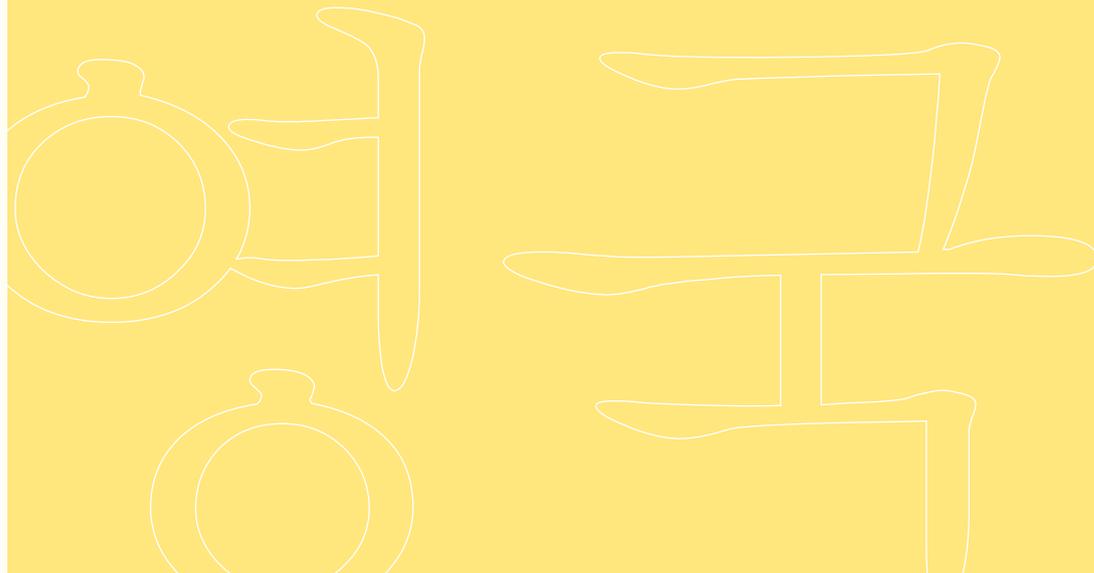


팔길이 원칙, 문화 민주주의, 창조적 산업

전후 영국의 예술진흥 정책 개관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팀 책임연구원



1. 국가의 개입

영국 예술진흥 정책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즉 국가의 개입 이전과 국가의 개입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이 가능하다. 국가가 개입하기 이전에는 예술이 일반적으로 왕족, 귀족, 부유 계층 등 특권층의 향유물로 인식되었다. 예술의 내용도 이들의 취향에 맞는 궁정음악, 오페라, 순수미술 등이 중심이었으며, 예술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왕족 등 부유한 계층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다수의 대중들은 예술 참여(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국가가 개입해 예술진흥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이와 같은 대중들의 예술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배경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즉, 소수의 향유물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예술이 되도록 국가가 개입한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개입이란 복지국가의 이념에 입각해 예술을 의료나 교육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준)공공재의 하나로 인식하여, 다수의 대중이 예술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의미한다.

2. 영국예술위원회: 세계 최초의 국가적 지원 기구

가. 영국예술위원회의 설립배경

복지국가적 관점에서 영국의 예술지원 시스템의 기원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영국에서는 자유와 민주사회의 표현 방식의 하나로서 예술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인식과 역할에 대한 논

의가 활발했다. 이러한 인식과 논의로부터 2차 세계대전 중 ‘예술 및 음악촉진위원회’(the Council for the Encouragement of Music and the Arts: CEMA)가 창설되었다. 현대 복지국가형 경제학의 기초를 제공했던 경제학자인 케인즈(John M. Keynes)가 CEMA의 의장이 되었다는 것은 영국의 예술지원 정책이 전후 복지국가적 주요 담론의 하나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예술 진흥을 위한 국가지원에 대해 케인즈의 의지는 1946년 CEMA가 예술을 지원한 세계 최초의 국가 기관으로 간주되고 있는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England)로 발전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나. 왕실헌장

예술위원회 설립의 기초가 된 왕실헌장(Royal Charter)이 1946년 최초로 제정되었고, 1967년 마지막 조항이 첨가된 새 왕실 헌장에서 영국예술위원회의 설립이념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다. 예술위원회는, 첫째 예술에 관한 이해와 지식, 예술적 행위를 발전시키고, 둘째 대중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셋째 위의 목적들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부처,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하고 서로 조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다. 예술지원금의 규모: 1950-60년대

제정과 경제 규모가 작았던 1950년대는 예술지원금(arts subsidy)의 전체적 규모도 미약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금은 1945, 46년에 23만 5천 파운드에서 10년 후 82만 파운드(1955, 56년)로 상당히 늘어났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원금 증가는 영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대중들의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든 196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60년대 중반 해롤드 윌슨(Harold Wilson) 노동당 정부는 최초로 예술부 장관(Arts Minister)이라는 직책을 뒀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예술 정책을 추구하였다. 최초의 예술부 장관인 제니 리(Jenny Lee)는 그녀가 작성한 <예술정책-첫번째 발걸음>(A Policy for the Arts: The First Steps)이라는 정부 문서에서 예술이 대중의 ‘일상적 생활’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명사회에서의 예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제니 리 문서의 즉각적인 효과는 예술지원금의 실질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이 증가는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말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1966년 390만 파운드, 1967년 570만 파운드, 1970년 820만 파운드, 1971년 930만 파운드, 1976년 2,880만 파운드, 1977년 3,710만 파운드, 1979년 5,180만 파운드의 폭발적 증가가 있었다.

라. 예술위원회와 정부(문화부)의 관계

□ 불간섭주의 원칙

1964년 영국예술위원회가 세워질 때부터 정권이 바뀌더라도 매 시기 정권을 담당했던 보수당과 노동당 정부는 문화예술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만 이 지원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라는 지원금의 쓰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묵시적인 정치적 합의를 하였고 지금도 이 합의는 존중되고 지켜지고 있다. 소위 ‘정부는 지원은 하되 위원회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즉 불간섭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문화부는 이 원칙을 문화부 예술정책의 최우선으로 두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국예술위원회와 지역예술위원회는 개별적 예술형태나 예술기관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팔길이 원칙: Arm’s Length Principle)’는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예술가, 극장 혹은 음악단체에 주어져야 할 지원금의 규모에 관한 결정들은 문화부 관료가 아니라 예술위원회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0년 동안 이 원칙은 영국 예술지원금 체계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왔다.”

□ 지원금 합의문서

영국 문화부와 예술위원회는 서로 긴밀한 협의 하에 대화하고 정책을 조율해서 만들어낸다. 예술위원회는 문화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문화부의 세부적인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독자적으로 분배를 하고 매년 예술위원회 사업과 이 사업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지원금 쓰임에 대해 문화부에 책임을 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영국의 문화부는 지원금 분배에 있어서 간섭 없이 예술위원회의 독자적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지원금 합의문서(Funding Agreement)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합의문을 바탕으로 예술위원회는 문화부가 설정한 예술 정책의 목표에 보조를 맞춰 지원금의 쓰임에 대해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2006년 영국

예술위원회는 예술참여, 청소년, 창조적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국제화, 문화다양성의 6가지를 주요 전략적 지원사업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

3. 시대에 따른 지원정책의 변화

가. 1968년 이전: 고급예술의 대중화 정책

1950-60년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은 오페라, 발레 등 고급예술(high arts)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고급예술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즉 고급예술의 대중화에 맞춰져 있었다. 이와 같은 고급예술 중심의 지원정책은 문화엘리트주의(Cultural Elitism)¹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당시 예술지원금의 혜택이 소수의 예술적 우수성/수월성의 본거지(centres of excellence)라고 인식된 국립극장, 왕립오페라, 왕립발레, 지역의 대형 공연장 등 소위 소수의 주류 예술인 고급예술단체에 집중되었다.

나. 1968년: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서구에서의 1968년은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갈망하는 기폭제가 된 변혁운동의 시발점이었다. 이 운동은 1960년대 중반 미국의 월남전 참전으로 가시화된 신제국주의 세계질서에 반발하여 일어나 1968년 파리 시위를 절정으로 베를린, 로마와 마드리드, 프라하와 부다페스트, 런던과 뉴욕에 이르는 전 세계적인 저항운동이었다. 초기 반전운동의 성격은 운동이 진전되면서 그 성격이 확대되어 마침내 기존 사회의 지배적 가치, 제도, 질서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도전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

는 거대한 문화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기존문화에 대한 대항문화 운동 혹은 대안예술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기존의 엘리트주의에 바탕을 둔 오페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트 갤러리, 공연장 등 고급예술 중심의 예술인식을 거부하고,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²의 원칙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대안예술 운동 주창자들은 문화엘리트주의를 힘과 영향력이 있는 소수 사회 집단이 구축해온 오페라, 발레, 연극, 교향악 등 고급예술의 주류적 위계질서를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핵심요소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술지원금으로 고급예술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고급예술의 문화적 주도권과 소수를 위한 문화엘리트주의를 보다 견고히 해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즉, 어떤 특정 예술의 형태에 우선권을 두어 지원함으로써 이 예술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문화 지도가 만들어진다는 자본과 예술의 상관관계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¹ 문화엘리트주의: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예술이 창조되고 이끌어진다고 보는 시각으로, 예술 창조 능력이 있는 소수의 창조자들이 창조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제공해준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문화엘리트주의자들은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수의 엘리트와 엘리트 예술기관들에 국가의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² 문화민주주의: 다수의 대중이 그들의 문화를 스스로 창조해 나갈 권리를 고급예술의 대중화 정책이 제한 혹은 방해한다고 보고, 대중들이 스스로의 문화를 창조해 나갈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중에게 예술 참여 기회와 균등성, 문화의 생산수단 등의 동등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정책담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의 하나로,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문화정책 생산자들의 정책입안 과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문화엘리트주의의 대안으로서 문화민주주의를 주창하였다.

다. 1968년 이후: 문화다양성의 이해

1968년 이후 대안예술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자 주류 고급예술을 중점 지원하는 예술위원회의 전통적 지원 방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70년대 문화민주주의에 관한 열띤 사회적 논의를 어느 정도 수용하여 예술위원회는 주류 고급예술에 대해 전략적으로 중점 지원은 계속하되, 늘어난 지원금으로 새로운 대안예술에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예술위원회가 당시 진보적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며 정치 운동을 연극에 접목시킨 정치연극 단체를 대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나 있다. 70년대 예술위원회의 위원장 구맨(Goodman) 경은 이들의 대안적 연극적 행위를 ‘이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바로 그 정부의 체제를 끊임없이 물어뜯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본주의적 정부 체제를 바꾸려고 작업하는 이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게 정부의 의무인지’ 계속해서 의문을 표시하곤 했다³. 그러나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그것도 매년 증가된 지원금을 이들에게 지원해주었다는 사실은,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것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 당시 영국 정부의 예술친화적인 역할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예술지원금의 70% 이상이 여전히 오페라 등 고급예술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4. 대처주의(Thatcherism): 1980년대

가. 복지국가적 예술 담론의 위기

1980년대는 복지국가의 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이 급등했던 시대로 영국 사회의 전 부분에서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변화가 단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 등과 더불어 예술과 문화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본적인 수정을 불러왔다. 영국 정부의 예술에 대한 관대한 지원 정책은 1979년 보수당 대처 정부의 등장과 함께 달라지기 시작했다. 1980년 정권을 잡자마자 대처 정부는 바로 전 노동당 정부가 약속한 예술지원금 중 110만 파운드를 삭감해 버렸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긴축재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대처 정부는 예술기관들에게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혹은 기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재원을 확보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나. 예술정원의 광영

예술위원회가 1985년 발행한 <예술 정원의 광영>(The Glory of the Garden)은 대처 정부가 주도한 의존하는 문화에서 기업가 문화로의 변화에 발맞추면서 전후 영국 예술의 지형을 바꾼 중요한 문서로 남아 있다. 이 문서에는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기업 경영적 운영 평가 지표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 지표들은 대처주의적 기업가 문화를 상징하는 말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돈의 가치’, ‘티켓판매를 통한 이윤’, ‘정부 이외의 다양한 수입원 확보’, ‘경영의 효율성’ 등이 강조되어 있다.

³ Secretary General's Report, 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Annual Reports and Accounts, 1978-79, p.9

다. 대처 정부 이후의 지원금 정책

1990년 대처가 수상에서 물러난 이후 1990년대 중후반까지의 존 메이저 보수당 정부도 대처 정부가 마련해 놓은 정책 의제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특히 1990년대의 경제적 침체는 정부의 긴축재정을 요구하면서 영국 예술지원금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92년에서 1999년까지 정부의 예술지원금은 1억 8,500만 파운드에서 전혀 인상되지 않았는데, 이는 예술단체의 증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높은 예술계의 제작비 등을 고려하면 영국 예술 단체들에게는 동결된 정부 지원금은 실제적으로 지원금 삭감과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18년 동안의 보수당 정권이 막을 내리고 1997년 토니 블레어를 수상으로 한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영국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자 예술지원금도 이에 비례하여 상승하기 시작했다. 2003년 블레어 정부는 존 메이저 보수당 정권이 정해놓은 1억 8,500만 파운드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3억 3,600만 파운드를 예술지원금으로 책정하게 된다.

5. 영국 예술정책의 주요 의제: 대처 정부 이후

가.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수용과 통합

국가의 역할이 축소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대처 정부가 등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시작한 1980년대의 영국의 보수화 정책은 많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는 경제적 불균형, 즉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여 사회 안전망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였다.⁴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의 치유 방안의 하나로 영국은 문화예술적 접근법을 활용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사회의 전 부분에서 효율성을 강조해왔던 대처 정부의 <예술정원의 광영>에 처음으로 가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예술 단체들의 지원금 수령 평가 기준으로 첫째 전통적인 심미적·예술적 측면, 둘째 경영의 효율적 측면, 셋째 교육과 사회기능적 측면을 설정해 놓고 있다. 80년대 이후 사회기능적 측면을 포함한 이 세 가지 평가 기준은 지금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 사회통합 정책 보고서

2001년 영국 문화부는 사회통합 정책 보고서(Progress Report on Social Inclusion)를 공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실업, 낮은 임금, 높은 범죄율, 빈약한 공공서비스, 열악한 주거 및 의료 환경, 가난, 가정 붕괴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사회의 가장 낙후된 지역에 대해 예술과 스포츠를 활용하여 생활·교육·의료 환경 개선, 고용증가, 범죄예방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스포츠와 더불어 문화예술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

⁴ 1980년대 대처주의 신자유주의적 변혁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의 확산이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정부재정연구기관(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통계는 대처 정부의 “복지지원금 축소와 세금의 감소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반 정도가 인구의 10% 정도인 가장 부유한 계층에게 돌아갔다”라고 밝히고 있다. 통계분석 1979-1988/89(A Statistical Analysis 1979-1988/89)는 1979년 최고 봉급을 받는 인구의 20%가 39%의 국민 총소득을 향유했는데, 1988년에는 1979년 보다 높은 44%를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총인구 중 가장 가난한 20%는 1979년 국민 총 소득의 9.5%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1988년에는 단지 6.9% 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문화부는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하는 데에 예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영국예술위원회의 사회통합 정책 방안

문화부와 지원금 협약을 맺고 있는 영국예술위원회는 “예술은 기술의 향상, 배움의 기회, 일자리 마련 등 사회경제적인 장점을 제공하면서 공동체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하면서 예술위원회의 지원 전략들 중 그 하나를 예술을 통한 사회적 통합에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예술 위원회는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여 그동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작업의 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⁵

□ 붉은사다리극단: 예술교육 및 사회통합의 사례

영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단체의 활동이 활발한데, ‘붉은사다리극단’(Red Ladder Theatre Company)도 이 중의 하나이다. 유럽에서 변화의 열기가 가득했던 1968년 사회주의 정치 연극을 표방하며 탄생한 이 극단은 80년대 대처 정부의 보수화 정책으로 인해 진보적 사회주의 정치 이념을 버리면서 8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극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붉은사다리극단은 주로 경제적으로 하층계급의 거주지인 소위 ‘문화적 불모지’(Cultural Desert)에 가까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이들의 고민과 문제를 소재로 삼아 연극 작업을 하고 있다.

물론 이 극단은 사회적 유용성에 입각한 예술 도구주의적 관점만의 연극적 행위를 담당하지는 않

는다. 청소년들의 연극과의 접촉을 통한 창작과 관극의 즐거움, 이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의 고양, 청소년 극단으로서의 예술성 역시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런 예술적 관점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이들의 상상력, 창의성, 감수성 등을 자극하고 고양시켜 이들을 미래의 잠재 관객뿐 아니라 예술 인재로 유도하여 영국의 창조적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초석이 되고 있다.

나. 창조적 산업

창조적 산업(Creative Industry)이라는 용어는 1998년 영국 문화부가 최초로 도입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 이 용어를 도입한 주된 배경은 영국에서 석탄, 조선 등 전통적 산업의 사양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종래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는 국가를 운영해 나가기 힘들었던 영국으로서는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으며 대처 정부에서 주창된 ‘문화산업’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여 90년대 말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 ‘창조적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블레어 정부 하의 영국문화미디어체육부는 창조적 산업을 신경제의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지식·정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인의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의 창의성은 문화산업의 개념을 초월하여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혁신’, ‘직관’, ‘틀을 깨는 사고’, ‘규칙 파괴’, 심지어 기존의 방식을 거역하는 ‘반항’ 등을 구성요소로 포함하

⁵ 영국예술위원회는 3년 단위로 예술지원금 및 복권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2006-2008년 3년간의 지원금과 기금의 총 규모는 11억 파운드(약 2조 원)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중 약 70-80% 정도가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예술단체’에 지원되고 있다.

고 있다.

1998년 영국 정부와 런던 시장은 ‘창조적 산업체’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1998년 영국 문화부에서 발간된 <창조적 산업의 영역 구분 문서>(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서 창조적 산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창조적 산업의 최초의 용어로 ‘개인의 창의성, 기술, 재능과 본질적으로 연관된 산업 그리고 지적 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생산을 통한 고용과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받아들여 왔다.”⁶

이 문서는 창조적 산업에 포함되는 13개의 분야로 광고, 건축,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산업, 미술품 및 고미술, 게임 소프트웨어, 음악, 행위예술, 출판업, 소프트웨어, 텔레비전과 라디오 산업을 선정하고 있다. 위의 산업들은 2000년 영국에서 1,200억 파운드(약 220조 원)의 가치를 창출했고, 132만 명의 고용을 달성했으며, 런던에서만 금융보험업 다음으로 GDP 2위를 기록했으며, 3번째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조적 산업은 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고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경향이다.

6.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전후 영국의 예술정책의 흐름은 우리에게 몇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문화민주주의 담론의 수용과 대안예술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의 사회기능적인 역할 도입, 창조적 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영국 문화정책 입안은 하나의 주요한 요소, 즉 예술위원회와 영국정부(문화부)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한국문화부와의 관계를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 설정했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문화부와 정책적으로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불간섭주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위원회가 정부와 협의 없이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정부와 긴밀한 정책적 협의를 거친 뒤 지원금 분배에 있어서의 독자성을 가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⁶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http://www.culture.uk>, 1998

글쓴이 전병태 영국 험대학 연극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대처주의적 자본주의 영향으로서의 1990년대 영국 연극의 경영과 경제>, <영국 사회주의 정치연극>이 있다.